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영|저|널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경신세무회계사무소

회계감사, 경영자문, 세무대리
인수합병, 가치평가
(공인회계사 윤기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718-25번지
TEL: 053) 255-2815 FAX: 053) 254-4833



COVER STORY // 신한국 문경시장

정책제안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

청호평론 // 국책사업 과열유치경쟁 경계해야

기획특집 // 대구 신서 침복단지 입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인물FOCUS // 성공한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사람, 김민영 왕호떡 회장

시사논단 // 쌍용차 파업 사태로 본 '노사분규'

기업탐방 // 지역 거점병원으로 거듭나는 영남대학교병원

부동산가이드 // 단독주택! 투자전성기를 맞이하다

통권제19호



PHOTO ESSAY

비상의 나라

누구나 한번쯤 비상하는 꿈을 꾸다. 새처럼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날기를 소망하며, 잃어버린 꿈을 찾아 비상의 나라를 펴고 힘찬 날갯짓을 한다. 청명한 하늘빛이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다. 태풍이 몰고 왔던 먹구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하얀 뭉게구름이 곳곳에 피어올랐다. 산과 강을 넘어 들판을 가로지른 넓은 창공위로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여름 내내 지친 몸과 마음을 날려 보내는 건 어떨까!



Contents



PHOTO ESSAY	02	비상의 나라
NEWS WIDE	04	NEWS
통계로 푸는 경제	06	지방경기 회복 조짐
COVER STORY	08	신한국 문경시장
정책제안	12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
정책조명	14	제2의 새마을운동, 도약을 꿈꾼다
청호평론	15	국책사업 과열유치경쟁 경계해야
기획특집	16	대구 신서 침복단지 입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인물FOCUS	18	성공한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사람, 김민영 왕호역 회장
시사논단	20	쌍용차 파업 사태로 본 노사분규
테마산책	22	한국, 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12억 시작이 열린다
기업탐방	24	지역 거점병원으로 거듭나는 영남대학교병원
개정법규	26	최근 개정법규 소개
법령해설	28	국가법령 해석
계약리뷰	29	경상남도 교육청,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업체와 부당계약 체결
부동산가이드	30	단독주택, 투자전성기를 맞이하다
생활경제	32	증권업계, CMA 어떤 상품이 있나?
리더 추천릴레이	34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5만원 | 신청방법 T. (053) 766-1368 | 이메일 chojs333@naver.com
 성함·주소·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름 기재)
 구독료 납입계좌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예교

<독자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과 평론 및 현장경험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크기10) 분량으로 경영저널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번지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이메일. chojs333@naver.com

경영저널 www.ecomanagement.co.kr

통권 제18호 | 발행인 이진구 | 편집국장 조종성 | 등록번호 경북다0123 | 창간 2007년 11월 5일
 편집위원 이준형, 윤일형, 정성민, 강석원, 김정국, 취재팀장 우성덕 | 기자장경태, 홍순대
 사진기자 이준혁, 서을 · 경기취재본부 031472-2061 울산 · 경남취재본부 052223-2261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곡5길 18 1동 301호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E-mail chojs333@naver.com | 가격 2,500원 |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산업단지 토지 용도 변경 대폭 간소화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입주한 기업이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 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던 것을 간소화 해 토지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 수요를 공급계획을 연결하는 장치가 미흡해 지역간 산업용지 수급 불균형 현상이 빚어져 왔던 것을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변경하고 제조업 이외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수의 업종과 지원 시설이 입주하는 복합건축물로 재정의했다. 현행 공장설립 관리정보망(FEMS)을 공장설립업무 처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해 공장설립 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경감시키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산집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4대강 보상비 연내 6천억 풀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하천구역내 경작지를 시작으로 9월부터 본격화된다. 연내 시중에 풀릴 보상비는 총 6천억원으로, 전체 4대강 사업 관련 보상비(2조7천억원)의 22%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내 토지 1억 550만㎡, 5만4천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천00동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4대강 사업에 투입될 보상비 2조7천억 원 가운데 하천구역 보상비와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 보상비로 총 1조 5천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40%인 6천억원이 올해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올해 보상비(3천147억원)와 비교하면 90%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보상 대상은 4대강 하천구역 내에서 개인이 점유 허가를 받아쓰고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같은 지장물로, 이 중 경작지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통해 보상을 시작해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민자사업 중도 중단시 투자비 80% 보장

정부가 하반기 어려운 재정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도로와 신재생에너지시설까지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모든 종류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인프라펀드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방식을 기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투자비의 8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액법으로 바뀐 경우 감가상각 등을 반영해 기존 민자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비율(65% 수준)이 2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과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을 각각 2012년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로또식’ 입·낙찰 폐지 공사능력 우선 고려

정부가 정부계약제도를 손질해 ‘운이 좋으면 낙찰됐던’ 운찰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기술력보다 운이 좋아야 당첨됐던 ‘운찰제’ 입·낙찰제도가 제거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로또식 복권’으로 일컫어지는 운찰제의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해 가격변수보다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역시 손질된다. 지금은 저가심의를 할 때 저가입찰공종이 전체 공종 수의 20%이상이면 심사없이 무조건 탈락되지만, 앞으로는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적격심사제도를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 내역입찰제도는 순차 도입한다. 내년부터 우선 10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1년 500억 원 이상, 2012년 300억 원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현재 16개로 산재된 국가계약제도 관련 법령이 전면 재정비, 성질별로 재분류된다. 업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 ▲연대보증인 제도 단계적 폐지 ▲기술제안입찰제도 적용대상 확대(행복도시, 혁신도시 발주공사에만→모든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 기준 선택 자율화 ▲과거 공사실적 평가 강화 등도 추진된다.



인천공항 민영화 갈등 격화



출처 : <http://photo.baeconry.com/2007/02/07/066025>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와 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공항공사는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공항공사가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으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항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2월 29억 원의 용역비로 미국의 맥킨지에 의뢰해 최근 완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의 중간보고서인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공유’는 인천공항이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13%의 매출성장과 18%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면서도 생산성과 운영대비 효율성은 주변 경쟁공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천공항이 비용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의 가치를 파괴했으면서도 시장형 공기업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 3%로 스위스 취리히 공항 1.8, 오스트리아 비엔나공항 2.2%에 비해 낮은 만큼 국제업무지역과 개발 예정인 Air City, 자유무역지역 등의 개발계획 보완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등 보유자산의 수익률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공항공사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자아비판식 흡집내기와 위기감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의 수순밟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지방경제 경기 회복 조짐, 소비 부진 완화, 설비투자 완화

_ 편집국

서비스업,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소 개선

소비는대형소매점판매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승용차신규등록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건설은토목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호조로 신장세를 회복 중이고 설비투자는 기계류투자의 부진이 완화되고 일부업종에서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등 투자심리도 회복 조짐이다. 수출은선박 디스플레이패널의 호조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고용시장은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으로 공공서비스업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다소 개선됐다. 또,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으로 전환됐다.

지방경기, 개선추세 지속

지방의각종통계,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보면 최근 들어 지방경기는 개선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은반도체, 화학제품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 1분기 -16%에서 지난 1분기 -6%로 감소세가 크게 둔화됐다. 특히대전충청권과 제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들어서도반도체 및 LCD,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부진 완화

소비는대형소매점판매 감소폭이 올 1분기 -3.7%에서 올 2분기 -0.7%로 축소되는 등 부진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승용차신규등록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인해 올 1분기 -18.6%에서 올 2분기 16.2%로 두 배가이 증가했다. 또 7월에는고소득층의 소비심리 개선으로대형백화점 매출이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낮은 경우 등으로인해선분기, 에어컨 등 계절기편을 중심으로 다소 부진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심리역시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업, 설비투자 신장세 회복

올 2분기와 7월중 건설활동은 토목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호조에 힘입어 신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건설수주액은 올 1분기 -14.8%에서 올 2분기 12.1%로 크게 증가했다. 건축착공면적도 6월 들어 지난 5월 -31%에서 지난 6월 -24%로 감소세가 크게 축소됐다. 설비투자 또한 투자심리 회복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투자의 부진이 완화되고 LED 등 일부업종에서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등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설비투자실사자수가 지난 4월 90에서 5월 92 7월에는 96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수출 감소세 둔화, 고용 개선

올 2분기 수출은선박 디스플레이패널이 호조를 보이고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부진도 완화돼 -25.4%에서 올 2분기 -20.7%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7월 들어서도 디스플레이패널,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정책으로 공공서비스업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다소 개선됐지만 부산울산경남권은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감소세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 상황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오름세 크게 둔화

소비자물가는 올 1분기 3.9%에서 올 2분기 2.6%, 지난 7월 1.5%로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다. 또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이 소폭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축수산물물은 올 1분기 7.2%에서 올 2분기 9.8%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 여수신 수신 증가세 둔화, 여신 증가폭 크게 확대

올 2분기 금융기관 수신은 지난해 연말 대비 156조원 기량으로 지난 1분기 216조원보다 줄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집행자금 예치 등으로 예금은행은 2.3조원에서 6.8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주기회복에 따른 펀드환매, MMF로부터의 자금인출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 증가폭은 1.93조원에서 8.8조원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9.3조원 -6.3조원)과 대전충청권(3.1조원 -2.2조원)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통계로 푸는 경제

지방경기가 생산과 수요 모두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생산은 반도체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전반기에 비해 감소세가 크게 둔화됐다.



	2008				2009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 생산	10.3	6.0	-12.0	-16.1	-6.6	-9.0	-9.2	-1.4	..
(인천경기권)	13.1	5.1	-16.5	-19.3	-11.3	-13.2	-15.4	-5.2	..
(부산울산경남권)	7.5	6.9	-2.0	-10.2	-4.6	-6.7	-8.8	1.8	..
(대전충청권)	11.6	8.8	-7.0	-7.3	8.0	7.7	5.0	11.4	..
(광주전라권)	2.4	3.8	-8.6	-17.9	-5.4	-7.7	-6.4	-1.9	..
(대구경북권)	8.7	0.2	-18.6	-25.1	-9.8	-13.7	-10.2	-5.3	..
(강원)	10.3	7.6	-2.6	-10.9	-8.6	-6.5	-11.1	-8.3	..
(제주)	-4.5	5.6	11.7	-10.9	13.9	6.4	11.4	24.8	..
제조업업황BSI ¹⁾	83	74	57	47	72	67	74	75	79
	(88)	(76)	(65)	(45)	(67)	(57)	(69)	(76)	(76)<79>
비제조업매출BSI	87	83	72	66	78	76	79	78	79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3.2	-0.4	-2.4	-3.7	-0.7	-2.5	1.8	-1.6	..
(인천경기권)	2.3	-1.4	-3.6	-5.6	-2.7	-5.6	0.4	-3.2	..
(부산울산경남권)	6.5	2.0	0.3	0.5	4.6	4.3	6.8	2.6	..
(대전충청권)	3.4	0.7	-4.7	-4.7	-0.5	-2.8	2.9	-1.6	..
(광주전라권)	5.8	2.6	2.8	-0.1	0.0	-1.7	2.5	-1.0	..
(대구경북권)	-1.8	-3.4	-5.0	-5.7	-4.3	-4.5	-4.3	-4.3	..
(강원)	0.4	-1.1	-4.1	-6.6	-2.9	-2.2	-0.2	-6.1	..
(제주)	10.4	0.7	2.3	-6.1	-3.4	-3.6	-3.2	-3.4	..
백화점 판매액지수 ²⁾	3.0	-0.2	-4.6	0.3	4.7	0.9	7.1	6.0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²⁾	3.2	-0.3	-1.3	-5.3	-3.1	-4.1	-0.6	-4.8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11.5	-2.2	-13.7	-18.6	16.2	-25.6	25.8	54.3	7.0
현재생활형편CSI	67	73	71	72	86	82	87	89	92
건축허가면적	-2.5	-12.9	-40.3	-29.5	-25.7	-44.3	-26.7	4.6	..
건축착공면적	-30.1	-25.5	-25.1	-20.1	-20.2	-22.7	-31.3	-2.4	..
(인천경기권)	-36.4	-33.1	-15.9	-41.4	-25.7	-36.0	-43.3	15.4	..
(부산울산경남권)	-38.4	-10.9	-29.9	-2.0	-29.2	-33.0	-39.2	-13.9	..
(대전충청권)	-8.8	-9.5	-19.8	-17.6	-11.5	-18.0	-14.8	3.9	..
(광주전라권)	-9.4	-4.0	-45.6	2.4	3.4	22.9	-8.9	-4.7	..
(대구경북권)	-24.6	-20.7	-30.6	-21.9	-25.5	-22.7	-23.6	-30.0	..
(강원)	-46.6	-68.7	-11.3	7.0	-23.6	-11.9	-35.7	-21.5	..
(제주)	-27.2	4.9	-32.6	104.8	-0.6	0.9	15.6	-25.7	..
건설수주액	-14.3	-15.2	-14.6	-14.8	12.1	6.3	2.5	24.3	..
미분양아파트 ³⁾	146,140	155,711	163,113	163,182	143,500	161,561	149,802	143,500	..
건설업업황BSI	54	46	37	47	63	58	66	66	67
설비투자BSI	99	96	89	85	92	90	92	94	96

주 : 1) ()내는 전기 조사시 전망치, < >내는 2009.8월 전망치
 2) 불변지수 기준(2005=100) 3) 기말기준(호)



COVER STORY

프로필

1970. 2 대구고등학교 졸업 / 1974. 2 영남대학교 졸업 / 1977. 2 KAIST 대학원 생물공학 (이학석사)
 1987. 8 A II(Asian Inst of Tech) 환경공학 (공학박사) / 1998. 5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장 / 1999. 12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장
 2001. 5 환경부 공보관 /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 KAIST 대우교수, 이화여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계명대 겸임교수
 (주) 삼표 대표이사 역임 / 안동대학교 초빙교수 / 2006. 7 민선4대 문경시장 취임
 주요저서 : 환경대통령(2007) 환경동네이야기, 환경과학총론, 환경학개론 등 다수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와 체험관광의 웰빙도시다. 1974년 이후 34년 만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문경은 올해 인구 8만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문경은 '체육, 관광, 문화, 교육, 농업 등 각 분야를 지자체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여겼던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비롯한 스키리조트, 대성계전, 알루텍, 캐프노벨 합작공장, 서울대병원연수원 등의 기업유치를 통해 투자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을 만나 문경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글/ 조종성 편집국장

사진/ 이준혁 기자



1 민선4기 3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사는 문경, 살맛나는 문경,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고자 취임 후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특히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가 넘쳐야 한다는 일념은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념 하나로 기업체, 연수원 등을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 조금씩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국군체육부대 유치로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 스키리조트, 알루텍, 캡노벨 합작공장, 성신산업 문경공장, 서울대병원연수원 등 많은 투자유치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시 산하 공무원, 시민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협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지난 1974년 이후 34년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돌아켜보면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문경이 하면 무엇이든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점이 가장 가슴 뿌듯했고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문경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은 무엇입니까?

한 때 500만명이 찾는 천혜의 관광도시로 알려졌던 문경이 경북 북부 낙후도시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역사문화 생태관광 자원,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역이라는 장점에 맞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역점시책으로 기업체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국립녹색문화관 건립 사업, 문경관광열차,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 사과 및 오미자 연구소 건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영강문화센터 건립,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 모전공린공원 및 모전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초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국군체육부대 유치로 호계면 견탄리에 25개 종목 70여종의 국제규격 체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통해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1단계 5천억 규모로 영상지원 활성화 단지인 M-Star Valley, 영상 studio 특화단지인 M-studio, 주거·의료·휴식의 새로운 영상휴양 명소화단지(M+bnæ Valley)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7,700억원, 고용효과 5만여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기회 확충, 세수증대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문경은 오미자, 사과, 쌀 등 특산품이 유명합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도·농 복합도시인 문경은 농업이 살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소신으로 친환경과 고품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오미자는 재배면적 420ha, 연간 1,500톤을 생산해 130여억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작물로 공동브랜드인 레드엠(redie M)과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으로 문경오미자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문경사과는 심한 일교차와 많은 일조량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연간 75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친환경 쌀, 한우, 약돌 돼지, 표고버섯 등 의 작목도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유기농, 저농약등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경시 유통사업단과 금년 초 개장한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적극 활용해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경쟁력을 강화하고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새재의 아침'을 대한민국 으뜸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미자 연구소와 사과 연구소를 건립해 오미자와 사과의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강화해 생산능력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료확대재배, 벼 건조저장도정시설 설치, 벼육묘 상토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과 역대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문경시로 이전하는 국군체육부대가 첫 삽을 떼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국군체육부대는 송파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문경이전이 발표 된지 2년 3개월 만에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원 148만㎡ 부지(45만평)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총 3,907억원을 투입하는데 시행자로 지정받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방식)을 적용해 조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진입로 개설, 부지정지, 가설건축물 축조,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게 되며 기공식은 오는 조만간 거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메인스타디움, 축구장, 야구장, 실내외훈련장 등 25개 종목, 70여종의 국제규격 체육시설, 영외숙소 128세대 등이며, 설계 및 시공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에서 맡아 2011년 10월 공사를 준공하고 부대이전은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전공사 기간 중 1일 900여명의 인력과 100여대 이상의 장비가 투입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전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는 인구유입과 전지훈련단, 연회객, 각종대회 개최 등으로 연간 10,000여명이 방문하고 체류하게 되어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국군체육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문경시는 스포츠 레저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경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 레포츠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과 스포츠의 연계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요람인 국군체육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25개 종목 국제규격의 체육기반시설을 보유한 자치단체가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국군체육부대 주변에 국가스포츠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스포츠, 레저, 관광, 휴양시설이 집적된 아시아 최고의 레저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스포츠 분야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다. 그 성과로 지난해 제6회 문경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를



(문경해내지구 조감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문경이 정구의 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돔 정구장 4면과 정구코트 실내 2면, 실외 8면을 보유해 동계훈련장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2009년 패러글라이딩월드컵 문경대회를 성공리에 마쳐서 작은 도시에서도 세계대회를 개최할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스포츠에 투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경은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을 기점으로 스포츠 레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스포츠 산업을 지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 국군체육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주변 지역에 스포랜드(스포츠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숙박, 위락, 레저스포츠 시설을 겸비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체육도시를 만들 구상입니다.

6 지자체마다 교육과 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문경시는 지역의 미래는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에 있다고 보고 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를 3%에서 6% 수준인 9억 6천만원으로 크게 늘려 학교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체육문화공간설치, 인터넷강의수강지원, 외국어교육 등 초중고 32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996년부터 문경시 발전기금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인재양성과 애항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적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폐환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등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을 통해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정보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고교생 해외명문대 탐방지원, 청소년 방과 후아카데미운영, 친환경인증쌀 및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소외 계층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저소득층 유류대 지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다문화가족 및 아주여성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말 개관한 '시민문화회관 소공연장 문화아트홀'은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영화를 상영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과 문화행사를 원했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복지보조원유아 양육보조금 지급,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과 기초경로연금 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등 다양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잘사는 복지문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아트홀 전경



<해외명문대 탐방지원>

7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며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고, 이제 하나하나 그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74년부터 줄던 인구가 34년 만에 증가하는 획기적인 한 해였고, 국군체육부대, 스키리조트 준공, 알루텍, 서울대병원연수원 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한 투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올해는 고용창출과 인구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넘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해보자' 가능하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관광객 1천만 시대와 인구 8만명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문경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민을 비롯한 출향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경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항공레포츠의 메카로 자리잡을 문경활강랜드는 편리한 교통망과 접근성이 양호한 전국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불정자연휴양림은 웅단처럼 펼쳐진 소나무, 잣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덕분에 신선한 공기를 늘 접할 수 있다.



국군 체육부대 조감도



세계 군인올림픽 유치 기념사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성공의 열쇠



지금 전국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마을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어촌 용어는 단순하게 농촌마을, 어촌마을, 산촌 마을에서 나오는 어감만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다. 마을은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자연환경 주민, 생활공간, 마을조직, 마을공동체등 다양한구성 요소로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되는 요소가바로 자연환경 이다. 농, 산, 어촌어촌 구분 자체가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이다. 이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최적의조건을 이용한 자연환경 에 맞춰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쉽지 않은난관이도사라고 있다.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문제점 극복해야

‘살기 좋은 마을 프로젝트’는 위기에 빠진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60-70년대 농업 위주 산업에서 70-80년대 중공업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고, 90년대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FTA 체제 하에서 우리 농어업은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2000년대 이후 본격 진행되기 시작한 이 사업들은 위기 속 농어촌을 부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농어촌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미 전국적으로 60여개 이상의 마을 만들기 컨설팅 업체가 생겼고 정부도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비 등을 지원하면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사업에 동참하면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는 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지부진하기도 했고, 오히려 농촌에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농촌(어촌, 산촌 포함)의 좋은 마을 만들기는 때론 부적절한 개발이란 오명을 안기도 한다.

정부 다양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재 전국적으로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마을 관련 개발사업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가 전원마을 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행정안전부가 정보화 마을사업, 환경부가 자연생태우수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림청이 산촌생태조성사업, 국토해양부가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을 조성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처별 사업성격도 생활개선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비롯해 도농교류 확대사업, 지역종합 개발사업 등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관광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마을 구성요소인 자연환경, 주민, 생활공간, 생산 공간, 마을 조직 등 마을 공동체의 원활한 물질순환과 자금자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다. 이와 함께 생태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통해 농촌과 도시 연계교류가 가능한 자연과 조화된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만드는 것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는 결국 모든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생활환경 개선	전원마을 조성사업
자연환경 보전	자연생태우수마을
도농교류 확대	녹색농촌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 전통테마마을
지역종합 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중앙부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 특색 구분 짓기 어려워 지역민과의 소통도 부족

이는 우선 우리나라의 특성상 농촌, 어촌, 산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경북 동해안만 하더라도 어업을 하면서 농사일도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산촌과 농촌의 개념이 모호하고, 국토의 70%를 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과 접해 있다.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중앙부처에서 작위적으로 산촌, 어촌, 농촌이라는 부처에 따라 경쟁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중앙부처마다 개발계획이 중복되면서 투자의 지속성 부재와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는 탓에 추진력이 쇠퇴한 결과를 빚어낸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족한 것도 이런 현상의 단편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민간투자 어려움,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구축 어려움, 도시민의 소비 수준에 발맞춘 경쟁 여가 시설의 고급화 등의 어려움도 있다. 또 지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과연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지역민들이 과연 친환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개발 사업 역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낯선 풍경이다. 수십 년간 생활했던 방식의 불편함이 도시민에게는 친환경적으로 보이는데 지역민들은 오히려 불편해하기도 한다. 가령 농촌의 농로만 하더라도 지역민들은 농사일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원한다. 비가 오면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민들은 친환경 마을이라고 체험하러 농촌에 왔는데 농로며, 마을 입구부터 산뜻하게 포장된 콘크리트 길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쉬운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달레마에 빠지게 되는 친환경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지만 지역민과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은 사업에 대한 법적인 장치에 불과하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 중요성 부각 지역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

이처럼 살기 좋은 마을은 위로부터의 개발, 밖으로부터의 개발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의 개발, 안에서부터의 개발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만이 성공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에 최근 경상북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70-80년대 우리 농촌의 부흥을 이끌었던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이러한 공동체적 발전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촌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들 간의 모임을 활성화시켜 의식변화를 촉진시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상자의 역할, 소득원 창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을 수행한 결과, 그들의 열정과 패기는 새마을 운동의 부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이런 역량 강화 교육에 경제적인 지원만 수반된다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연스럽게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결국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도시민의 지지 등 우호적 외부 환경과 농촌 주민의 주체적인 노력, 농촌리더의 리더십 등 내적요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외부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발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전을 제시한 뒤 실천하는 농촌지역 리더의 리더십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책조명

_ 편집국



제2 새마을운동운동을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한국 근대화의 상징인 '새마을 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운동의 정신 문화 유산이 외국의 호평을 받으며 해외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세계 92개국에서 4만 7000여 명이 새마을운동을 배워 갔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개국 64개 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튀니지 등 8개국 공무원 18명 정규교육 받으러 입국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 아프리카 주요 국가 중견 공무원들이 대거 새마을운동 정규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개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국을 수차례 주목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들은 개도국 관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관광기구(WTO) 산하기구로 설립된 "유엔-WTO 스텝(step) 재단"에서 4개월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데 이어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북에서 2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역할" 등 12개 강좌를 수강 하고, 이달 19일부터 구미에서 열리는 새마을박람회에도 참가한다. 특히, 국가 중견 공무원인 이들이 견학 수준의 방문이 아닌 정규 새마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에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경북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원조사업에 새마을운동 방식을 접목, 교육공무원 숫자를 확대해 아프리카 지역 농촌개발운동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새마을회가 구성된 콩고를 비롯, 아프리카 전역에 새마을 조직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 제2의 새마을 운동 전개 해외 보급에 앞장

경북도는 40년 동안 도청 안에 새마을과라는 행정조직을 유지해 왔다. 경북의 23개 시·군도 모두 새마을과나 계를 운용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몇 차례 정부가 바뀌면서 새마을과를 폐지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구미시는 지금도 매월 1일 새마을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로 이어지는 박정희로와 안근 새마을로에는 1년 365일 새마을기가 펄럭인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새마을 운동의 해외 보급 운동에 일찍 눈을 돌렸다. 경북도는 해마다 대학생 새마을해외봉사단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오지 마을로 파견해 마을 안길 포장과 의료보상,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는 UN과 손잡고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2개국 4개 마을에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착수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새마을운동의 전도사를 지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2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 '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의 신 농촌건설'을 주제로 강연했다. 대통령이나 총리급 인사들이 주로 강연하는 곳이지만 새마을운동 덕분에 예외였다. 칭화대 학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강연은 40분 만에 끝났지만 질문 공세가 1시간이나 이어졌다고 한다. 경북도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을 한국 대표의 국가브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무형의 자산인 새마을운동을 한류 상품으로 수출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브랜드 상승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책 사업 과열 유치경쟁 경계해야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가 경쟁에 뛰어난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지가 대구 신서 충북 오송 두 곳으로 최종 결정됐다. 예정지가 결정되자 탈락 지자체들은 선정 절차의 문제점과 정치적 혜택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해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마다 과열유치 경쟁폐단 심각

이는 대형 국책 사업에 사활을 거는 지자체들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말 민주당 소속인 김완주 전북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의 새만금사업 본격 추진 계획에 대해 감사편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편지에 '저와 200만 전북도민들은 대통령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라고 해 논란을 샀다. 시대에 맞지 않는 대통령 칭송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지역 내에 벌어놓은 대형 국책사업이 20년 가까이 흐지부지했으니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이해도 간다. 국책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의 단적인 예를 씩씩하게 보여준다. 결국 첨단단지과 같은 지역 배치형 국책사업은 입지선정과과정에서 과열 유치 경쟁과 이에 따른 지역 간 갈등, 탈락 지역의 후유증 등 이러한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자체 선정 과정 반발 정부 정책 일관성 잃게 해

문제는 이런 폐단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사업의 경우 2006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몇몇 지자체들이 치열한 사전 로비전을 벌이는 불쌍사나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2007년 로봇랜드 유치 경쟁이나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전 등에 탈락한 지자체들은 선정과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당시 로봇랜드는 지자체 10곳이,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엔 광역도시 4곳이 경쟁을 벌였다. 태권도공원 유치전에는 무려 17개 지자체가 승부를 다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과열경쟁은 불가피했고,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지역 간의 과열경쟁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국가 경쟁력마저도 허물어 버릴 우려가 커진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경쟁과 관련해서는 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공항 건설 비용이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후보지 선정 작업을 연기할 것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입지 선정에서 지역 간의 합의 도출이 관건이라며 탄청을 부리고 있다. 이는 지역 간 합의가 안 되면 대형 국책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탈락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스스로 사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국책 사업 입지 선정 과정 투명성 높여야

물론 자체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로선 단채장 업적으로 남는 매력적인 국책사업에 사활을 거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위해 국책 사업 경쟁에는 지역마다 '유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지역민의 하나된 의지를 과시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지역 정치권을 향해 '정치생명을 걸어야'는 식의 강한 압박을 가한다. 또한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일부 지역민들과 지역 언론은 해당 지자체를 성토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밑바탕에는 사업 취지의 핵심이 비껴져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성장동력 육성과 지역발전의 기회를 가져올 국책사업의 입지가 타당성과 효율성보다 지역 간의 우열 다툼으로 결정될 소지가 큰 것이다. 정부는 조정기능을 외면한 채 갈등 최소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책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때 입지 선정에 탈락한 지자체가 쏟은 인적, 재정적, 행정적 낭비의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책사업 입지 선정 제도가 보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을 마련하기 바란다.





신성장 동력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신서 혁신도시 선정

미래 성장을 주도할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대구경북에 유치됐다. 30년간 5조6천억원이 넘게 투입 될 대형국책사업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산업구조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 정부의 첨복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예정부지 경비를 비롯한 실시 설계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간자본 유치, 의료계 적극적 동참이 성패 좌우

대구시는 현재 첨복단지 입점 부지인 신서 혁신도시 예정지의 부지 보상이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낼 계획이다. 이르면 정부가 계획한 2012년부터 1년 정도 앞서 단지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도는 의약품 생산을 담당할 제약회사 및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는 한편 첨단의료 기기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도 간 협력과 지원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광주시와 맺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충실하게 지키는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위해서는 민간 자본유치와 지역 의료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도 안겨 됐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는 첨복단지 지정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재유치기금 조성(1,000억원), 메디시티 기금(2,500억원), 땅값 지원금(4,000억원) 등 막대한 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첨복단지, 생산증대 82조 2천억원, 고용 창출 32만2천여명 전망

첨복단지가 대구 신서, 총복 오송 2개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말 발표된 계획안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첨복단지에는 오는 2038년까지 시설, 운영비 1조 8,000억원, 연구개발(R&D)비 3조 8,000억원 등 민관 합동으로 5조 6,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정부는 핵심 R&D 인프라의 개발운영비 등 전체 34%인 1조 9,000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3,000억원(5.3%)을 부담한다. 민간에서 투자비의 절반이 넘는 3조 4,000억원(69.7%)을 투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첨복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82조 2,000억원의 생산증대 효과와 38만 2,000여명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첨복단지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이상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인프라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개발지원센터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첨단임상시험센터(병원)
연구지원 시설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연구센터 • 실험동물센터 • 임상실험신약생산센터
연구기관 입주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업·대학 등연구소 • 국내외 전임상시험기관 • 벤처연구타운
편의시설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숙소 등 커뮤니티센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신서 혁신도시 침복단지 조감도)



의료산업 시너지 효과, 기업 및 투자유치 청신호

대구의 의료 인프라는 수도권에 버금간다. 4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대가 있고, 약대, 간호대를 합하면 모두 16개 대학이 의료 관련 학과를 두고 있다. 종합병원도 12개다. 또 14개의 정부 지정 의료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의만 7500여명에 달한다. 전국 최고의 한방인프라까지 갖췄다. 이를 통해 침복단지 유치는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세계적인 의료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대구경북은 성형, 피부, 한방 관광 등 각종 의료관광산업 기반까지 연계하면 연간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와 시설, 인력은 곧바로 산업 분야인 IT와 메카트로닉스로 직결된다. 대구시는 IT융복합을 지역 선도산업으로 지정하고 세부추진산업의 제1순위로 꼽고 있다. IT와 의료산업을 합쳐 첨단의료기기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IT의 만남은 산업의 규모를 가능하기 힘들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고, 침복단지 유치로 신성장 동력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침복 단지가 들어설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는 앞으로 국내외 기업체 입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업체의 지역 입주는 지역 고용유발효과는 물론 세수확보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침복단지 유치로 지역에는 41개의 국내외 업체 입주가 예정돼 있다. 글로벌 제약업체 한국 화이자 등 36개 업체와 연구개발기관이 입주한다. 또 의료산업 관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바이넥스트펀드(주), 대경창투(주) 등 벤처캐피탈 등도 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풀 전망이다.

정치 경제 '외풍' 이 변수, 휴유증 극복도 과제

30년에 걸친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이나 방향대로 단지 조성이 가능하지가 첫번째 과제로 꼽힌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낳았던 충청 세종도시의 사례처럼 정권교체 등을 통한 정치경제적 '외풍'을 맞을 경우 자칫 사업에 큰 난항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이며 치열한 지자체간 유치전을 벌인 만큼 탈락 지자체들의 휴유증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탈락된 지자체들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등을 놓고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반발에 더해 강원, 충청, 경기 등 탈락 지자체들이 이미 의료산업단지를 독자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어 자칫 침복 단지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우려도 남아 있다. 이에 탈락 지자체들이 특혜설이나 정치적 판단설 등에 따라 입지를 선정했다는 거센 반발 움직임을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는지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졌다. 침복단지 중복 선정으로 인한 투자 분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조성된 기존 단지와의 연계성을 얼마나 살려 중복투자를 막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도 떠안았다.



1 500원 호떡으로 이뤄낸 성공신화

김 회장은 전국구 스타다. 유명 연예인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인이 돼 있었다. 지난 2003년 KBS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출연해 12억원을 잃고 재기에 성공한 스토리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부터다. 이후 연이어 TV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왔고, 언론사마다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문의가 쇄도하는 '인기 강사'도 됐다. 김 회장은 "주식으로 12억원을 날리고, 호떡장수로 재기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인상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1개 500원 하는 호떡으로 연봉 1억원이 넘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1평 남짓한 노점상에서 이뤄낸 믿기 어려운 큰 성공이었다. 왕호떡이 유명세를 타자 그의 이름을 딴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호떡 만드는 노하우를 가르치기도 한다. 여타 프랜차이즈 사업과 달리 '김민영 왕호떡'이라는 그의 이름만 빌려줬을 뿐, 김 회장은 각 점포에서 얻은 매출액의 단 한푼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열게 된 '김민영 왕호떡' 프랜차이즈 점포는 전국에 130개에 달하고 있다. 그는 '성공했다'라는 말보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김 회장은 "이미 큰 실패를 겪어 봤기 때문에 지금 '성공'이라 불리는 것들도 한낱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김민영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다"고 웃었다.

2 자살까지 생각했던 빚쟁이

김 회장은 한 때 자살을 기도할 만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주식으로 12억원이라는 큰 돈을 날린 후였다. 그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큰 바다에서 우리 같은 작은 물고기가 노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바다 속에서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한테 잡아 먹히는 존재일 수 밖에 없거든요"라고 회상했다. 벌써 7년이나 지나버린 아련한 과거일 뿐인데도 아직까지 김 회장은 그 당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김 회장은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KT에 근무하며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다. 10여년 가까이 근무해 오면서 지난 1999년 직장 동료들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두 달 사이 3배에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주식에 맛을 들었다. 가만히 앉아서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의 돈을 버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렇게 회사 업무시간에도 온종일 주식거래에 매달리면서 '돈맛'을 들었다. 하지만 주식은 김 회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제가 주식으로 12억을 벌었죠. 그 때 그만 댔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니까 자꾸 욕심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주식을 잘못 사는 바람에 한방에 12억을 날리고 2억원 가까이 빚을 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 김 회장은 자살까지 생각하며 돌아가신 아버지 묘소에도 찾아가다.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다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빚을 갚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희망퇴직'하고 무작정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다. 그의 나이 마흔 다섯, 2001년 5월 무렵이었다. 서울로 올라 온 김 회장은 부인과 두 딸과 함께 10평 남짓한 전세방에서 다시 시작했다. 김 회장은 "이사하면서 하루 딱 집정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퀵서비스 일을 시작했어요. 집사람은 식당일, 파출부 일을 했고요.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호떡 노점을 시작했던 겁니다"라고 했다.



▶ 성공한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사람,
김민영

왕호떡 회장은 항상 나비넥타이에 깔끔한 정장으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1평짜리 호떡 노점상에서 하루 종일 호떡 반죽을 하고, 호떡을 굽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난다. 연신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호떡을 굽다 손님들을 위해 간간히 선보이는 마술은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다.

성공한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사람,
김민영
왕호떡
회장

우성덕 취재팀장



3 남과 달라야 살아남는다

점포를 내게 된 김 회장은 성공하기 위해선 무조건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소자본으로 무엇을 팔지 고민하던 김 회장은 호떡을 떠올렸고, 그렇게 그 해 여름, 1평 남짓한 공간에서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호떡을 굽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사 초기 이상한 '호떡 장수'로 비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도 많았다. 당연히 장사도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열흘 동안 호떡 반죽만 먹었을 정도로 호떡 맛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입소문을 타고 서비스와 맛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웃음치료사, 레크리에이션, 마술사 자격증까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모두 다 배웠다. 호떡을 팔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간간히 100여 가지에 달하는 마술쇼를 선보였다. 호떡 한 개만 시켜도 가능한 배달까지 했다. 배달을 하면서도 전화로 주문한 고객에게는 전화요금이라며 100원도 환불해 준다. 주머니에 마술도구를 하나 가져가서 마술도 보여준다. 또 돌아와서 해피콜을 통해 맛이 어땠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품평까지 듣는다. 김 회장은 "호떡 하나를 통해 제가 고객에게 4번의 감동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음에 또 호떡을 사먹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오감을 자극하는 김 회장의 서비스가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나비넥타이와 중절모, 마술로 무장된 호떡장수 김 회장의 유명세도 확산됐다. 김 회장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프로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손님을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어떻게 여름철에 호떡 장사하냐는 고정관념도 버렸죠. 여름철에 호떡장사를 시작해 지금도 세계적 내내 호떡장사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호떡을 파는 게 아니라 길 위에서 사람들에게 제가 지닌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그 많은 빛도 다 갚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만한 33평짜리 주택도 마련했다. 김씨는 "남과 똑같이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장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호떡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행복을 위한 '서비스'를 팔고 있는 겁니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 문제의 본질을 짚어야

이번 사태는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다시 한번 각인한 계기였다.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장 불법 점거와 폭력 사태 등은 극단으로 치달는 노사 양측의 대립에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치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브랜드 가치 하락, 판매망 와해 등을 고려할 때 매각되더라도 회사의 경영 정상화는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쌍용차 노조 지도부의 경직된 태도는 오히려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구조조정은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며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도록 한 책임은 분명 지도부에 있다. 외부에서는 회사의 회생을 바라며 농성 해제를 바라는 노조원들이 다수였음에도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결국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한 노노갈등까지 초래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회사가 파산하긴 말 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은 생존권 투쟁이라기 보다는 반기업투쟁이나 반자본투쟁"이라며 일부 노조원들이 맹목적 이념에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1980년대 이념처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가면서 불법이 마치 정당화되고, 지지를 받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이 현재까지 관행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고용문제도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공장 점거와 폭력 행사 등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을 인식하면서도 왜 그렇게 강경투쟁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처럼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하고, 전직과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파산이나 회생이나는 갈림길에 선 쌍용차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정리해고 반대'라는 금속노조 등 외부세력의 개입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측면도 있다.

극단적인 저항, 사회 안전망 불충분이 요인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과 고용 대책 등을 먼저 갖춰야 노동자들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투쟁이 극단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극단으로 치달는 사태에 가시적인 노력과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손쉽게 공권력만 투입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적게는 2만, 많게는 20만명까지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이 갖는 해고의 의미를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연 안정성(flexicurity)'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유연 안정성'이란 고용의 유연성을 허용되는 대신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재교육, 재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구사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
시사논단
_ 편집국

쌍용차 파업 사태 일단락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가 77일만에 노사간 극적 대화로 타결됐다. 노사는 1대 협상에서 당초의 정리해고 대상자 937명 가운데 52%를 희망퇴직과 분사 등으로 정리해고 하고, 48%를 무급휴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우려했던 파국은 면했지만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과 충돌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노총 노동운동 갈수록 동력 잃어

쌍용차 사태가 노사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됐다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설사가상으로 민주노총의 하반기 일정 또한 순탄치가 않다. 우선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걸린다.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규정 대신 사용사유 제한 규정을 새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할 방침이다. 이미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둔 상황으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과 연계해 입법을 추진해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입자 임금 폐지' 문제도 이번 하반기에 논의된다.

정부가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치열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에서도 보듯 민주노총의 대규모 대정부 투쟁 동력은 상당히 약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문제를 두고 무장투쟁까지 강행했지만, 정리해고자 974명의 52%는 분사, 희망퇴직으로 해고하는 선에서 시축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큰 축인 현대차 노조가 지도부의 사퇴로 투쟁 동력을 잃었고, 공공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KT노조는 조합원의 95%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동력 저하는 최근 민주노총이 노동 현장 중심의 현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 노선을 채택한다는 데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올 상반기 성폭력 사건으로 민주노총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해 진정성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노동 운동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희생 위한 날개짓 본격화, 완전 정상화는 불투명

노사 합의를 이뤄낸 쌍용차는 지난 7일 생산, 경영, 재무 등 각 부문에서 정상화를 향한 날개짓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파업에 따른 후유증으로 자체 생존 여력이 크게 약화돼 완전 정상화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쌍용차는 도장2공장과 부품도장공장의 손상 현황을 파악하면서 각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달 15일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작업도 재개됐다. 쌍용차는 파업이 가져 온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라인 정상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청산가치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과 채권단을 설득할 예정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세우는 것이 쌍용차 앞에 놓인 과제이다. 퇴직금 등 인력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쌍용차의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후 매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 체결, 12억 인도시장이 열렸다.

_ 편집국

테마산책

한-인도 CEPA 협정

3년 넘게 끌어왔던 한-인도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지난 7일 정식으로 타결됐다.
이제 국회의 비준만 통과되면
발효가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올 정가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세계 인구 2위,
12억 인구의 거대한 인도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수출입품 발효 즉시 관세 철폐 서비스업 인력 개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양허 부분에서 금액기준으로 한국의 수출품의 38.4%(15억 달러), 수입품의 63%(12억 달러)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수출품목의 3.9%(202개), 수입품목의 60.6%(6824개)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5년 또는 8년 안에 한국의 수출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537개 품목(67.6%)이며, 수입품목 중 5년 또는 8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360개 품목이다. 한국의 10대 수출품 전체 수출액의 42.1% 중 경유(제트유)를 제외한 8개 품목은 즉시 또는 8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도의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문화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한국계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합의했다.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해 한국시장으로의 인도 인력의 진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아보조교사 등의 인도인력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쟁점이 되었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분야는 미양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투자부문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인도시장을 개방했으며, 투자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한국기업들의 현지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먼저 협정을 체결한 점은 시장 선점의 이점을 누릴 좋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와의 CEPA는 거대 인구를 가진 고성장 신흥시장과 맺은 처음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경제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신흥시장 진출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인도 시장 공략 유리 수출경쟁력 높아질 듯

한-인도 CEPA 타결로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부품 및 섬유,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인도 CEPA타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주요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 철강금속제품, 섬유기계 등이 단계적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돼 수출경쟁력이 커지고, 경북은 열연과 냉각강판등 철강제품이 관세인하 효과와 함께 선박 등 연관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8년 기준 대구경북지역의 대인도 수출은 14억 8,000만 달러, 수입은 3억 2,000만 달러로 교역규모는 18억 달러다. 이 가운데 대구는 수출이 1억 2,000만 달러, 수입은 2,700만 달러, 경북은 수출 13억 6,000만 달러, 수입 3억 달러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는 대구경북지역에서 9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대인도 수출입 및 무역수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수출이 30~40% 가량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철강금속제품, 섬유기계, 폴리에스터직물, 고철 등이며, 수입은 박류유채, 순면사, 농약원제 사료, 염료 등이다. 경북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열연강판,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무선전송기, 자동차 부품, 전기강판 등이며 수입 품목은 기타합금철, 아연광, 박류, 실리온 강간철 등이다. 이에 대구상은 이번 타결을 통해 지역업의 인도시장 진출 기회로 여기고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투자와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투자환경을 개선해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됐던 농산물 부문은 양국이 공히 민감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 피해 발생을 방지했다.

컴퓨터게임 디자이너 요가 전문가 등 유망 직업 떠오를 듯

한-인도 간 CEPA 협정이 발효되면 컴퓨터게임 디자이너, 요가 전문가 등이 인기 있는 직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직업평론가인 김준성 연세대 생활관 차장은 최근 한국과 인도 간 CEPA 체결이 직업시장에 주는 영향 분석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유망직업 10가지를 발표했다. 직업군으로 컴퓨터게임 디자이너, 필름 딜러, 요가 및 명상 전문가, 자동차 부품 연구원, 가전제품 국제 수출인, LCD 엔지니어, IT 컨설턴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해외건설 수주 전문가, 식량 국제 딜러 등이다. 컴퓨터게임 디자이너의 경우 인도의 경제성장 속도와 12억 명에 달하는 세계 2위의 인구가 감안된 것이다. 향후 한국의 컴퓨터게임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인도의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미국의 할리우드와 비교해 발리우드로 불리는 인도의 영화시장이 개방되면서 영화를 수출하는 필름 딜러의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매년 400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양국의 공동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은 양국에서 국내물로 간주돼 일본 영화와의 경쟁력도 더 커지게 됐다. 또 현대 사회에서 지친 직업인들의 마음을 갈고 다듬는 운동 효과가 있는 요가 및 명상 전문가들이 인도에서 넘어올 수 있다. 한국 가전제품의 인도 수출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여 가전제품 국제 수출인과 LCD 엔지니어의 전망도 좋은 편이다. 인도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보호전문가, 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증 등을 가진 IT 컨설턴트의 인기도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번엔 서비스 개방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인도의 의료시장이 향후 개방될 경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인기가 높아질 직업으로 꼽혔다. 인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하려는 미국인 의료 소비자들이 많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 거듭나는

영남대학교병원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기업탐방 _ 편집국



영남대 의료원은 지난 1983년 생명중심의 기본이념과 따뜻한 인간애를 환자진료로서 구현한다는 이념 아래 설립됐다. 지속적인 리모델링 사업과 최첨단 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 영남대 의료원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추구, 고객 만족 가치 경영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사장 이기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후원하는 2009년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산업별 최우수 병원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 우뚝!



PET-CT 2호기

영남대 병원은 2007년 3월 '비전 시선 2'를 선포했고, 지난해부터는 '사랑으로 Jump Up'을 통해 고객 사랑과 함께 성장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7년 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서비스 전 부문 'A'라는 영예를 획득했고, 2007년에는 '2006년도 6대 암 질환 수술 건수' 전 부문 전국 종합 병원 20위 내 진입(위암수술 전국 16위, 간수술 전국 10위, 갑상선암수술 전국 8위, 대장암수술 전국 12위, 폐암수술 전국 20위, 유방암수술 전국 7위)을 달성했다. 특히, 담도내시경 시술 건수는 1만례를 돌파해 담도내시경 수술 건수 전국 상위 5위에 랭크되는 등 지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입증했다. 특히 2005년에는 '뇌졸중 환자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영천영대병원과 함께 대구경북권 지역 유일의 '뇌졸중 치료 우수병원'에 선정돼 고객 만족도 1위란 비전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최신 의료장비 도입에 있어서도 2004년 지역 최초 PET-CT 도입에 이어, 2007년 4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최첨단 PET-CT 2호기를 도입해 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란 의료기술 혁신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2007년 경북 영양군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과 협력기관 협약 체결, 지역 유관기관(남구청, 동구청, 달서구청, 대구시노인복지관, 대덕노인복지회관, 교회, 영남이공대학, 남부경찰서 등)과의 제휴를 통해 지역민을 위한 공개 건강강좌를 펼치고 있다. 또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외국인진료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미8군 제18의무사령부와 의료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2007.08.17)해 미 현역 및 퇴역군인과 가족의 지정병원으로 확정돼 국제화의 흐름에도 발맞춰 나가고 있다.

고객만족 실현, 미래 의학인재 양성



의과대학 e-러닝 시스템

시설 부문에서는 의과대학에 e-러닝 시스템을 구축, 명실공히 지역 의과대학에서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며 미래 의학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역 최대 규모의 고품격을 갖춘 격조 높은 정례식장을 오픈(2007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강좌 및 교육 부문에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암교실을 비롯한 당뇨교실(매주)과 뇌졸중교실, 심장교실, 척추교실 등의 건강교실을 개설해 건강강좌와 무료 건강검진을 펼치고 있다. 또 로비 음악회와 전시회,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등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 등도 개최하고 있다. 진정한 고객만족을 위해 원내 CS 감사 및 CS 코치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부직원들의 변화를 이끌어 왔고, 지역병원과의 공고한 협진체계를 위해 1·2차 협력 병원 직원 대상의 교육, CS 아카데미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 지역병원과 연계한 함께 크는 병원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화센터 잇따라 지정,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진료 실현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센터 리모델링 개소식

진료 및 연구 부문에서는 지난해 지역 최초 담석클리닉 개소를 통해 담석 환자에 대한 원스톱 진료서비스 제공과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랑병실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2003년 지역 최초 뇌졸중센터 개설과 더불어 지난해 4월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가동해 뇌졸중 환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2007년 '임상 질 지표 시범평가 대상병원'으로 선정(2006년)됐고, 출기세포연구회의 꾸준한 임상연구 노력의 결과로 지역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식약청으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졸중 치료 임상연구'를 승인(2006년)받았다. 이와 함께 영호남 지역 최초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2007년)됐고, 정부 주관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 양성 과정을 유치, 전문가 50여 명의 배출과 함께 UNDP(유엔개발계획) 사업의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대상 방사선 위탁교육 기관으로 선정(2007년)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전문인 양성 교육기관의 위상도 갖게 됐다.

'정부, 대구경북권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로 선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영남대학교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 대구경북권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센터에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 대학병원의 전문질환센터 육성을 지원, 지방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복지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대경권, 충청권, 동남권, 강원권, 호남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당 2개소의 전문질환센터(호흡기, 류마티스,관절염)를 선정해 각 센터별로 4년간 국비 총 2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영남대병원은 향후 대경권 전체인구의 60%를 상회하는 호흡기 질환자 치료 뿐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 및 공공보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호흡기 질환 예방사업, 교육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센터는 호흡기내과를 비롯해 감염내과, 혈액, 중양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등 관련 진료 부서간 완벽한 협진체계를 구축, 환자가 여러 진료부서를 옮겨 다니는 불편을 일거에 해소하는 통합 진료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만성폐쇄성폐질환클리닉을 비롯해 폐암클리닉, 천식 비염, 알레르기클리닉, 염증성폐질환클리닉, 수면무호흡클리닉, 흉막질환클리닉, 호흡재활클리닉, 호흡기질환검진클리닉 등 8개 전문클리닉 운영을 통한 진료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남대병원은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 지원 이외에 146억원의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자, 병원 본관 전면의 핵심부지 3,791m²(1,149평)에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에 이르는 연면적 16,256m²(4,917평), 150병상 규모의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 독립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2010년 착공,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토지용도 변경 간소화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시설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용도 변경할 경우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토지용도 변경 신청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바꾸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토록 했고, 노후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명시해 실질적 사업추진 절차를 마련했다.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쉬워진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의 설립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간접투자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츠의 공모의무비율을 줄이고 1인 주식의 소유제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개정 절차를 검토를 통해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 설립요건 중 공모의무비율을 현행 자본금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공모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공모 대신 기관투자자들의 자본유치가 한결 쉬워지는 셈이다. 또, 1인 주식소유 제한 비율은 현행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1인 주식 소유비율이 3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현재 4곳 이상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야 리츠 설립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곳 이상이면 투자자 모집이 가능해져 리츠 설립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채부동산소유자도 전액 현금보상

부채 부동산소유자 중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 토지수용시 전액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채 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채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해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않아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익사업지구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선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발표했으므로 1/4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 해양레저시설 본격개발 길 열린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오토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해양레저 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청정바다와 2000개의 섬, 긴 해안선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으로서는 앞으로 관광과 해양레저·스포츠 등이 어우러진 고부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지난 6월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안을 담은 마리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오토, 레저보트 등 유람 스포츠 여가용으로 제공해 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마리나선박의 정박 계류시설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마리나 기본시설에는 방파제와 호안 등 외곽시설을 비롯해 항로, 정박지, 선류장, 안벽, 부잔교, 계선부표 등이 있다. 주정장과 보트참고, 경사로, 크레인 등 기능시설과 진료와 체육, 숙박 위락과 같은 서비스시설이 포함된다. 또 마리나개발 사업시행자를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개발사업을 민간 제안하는 경우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안사항을 공고토록했다. 이와 함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하거나,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면 1년간 가게 이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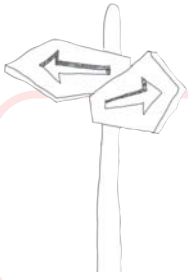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1년간 가게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농림수산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되면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업체 소재 시·도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소, 위반내용이 공표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에 적발되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시·군 공무원들에게 발각되면 시·도 홈페이지에 알리는 식이다.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이용한 가공품도 추가된다. 이에 양념 돼지주물럭, 떡갈비로 팔리는 분쇄가공육, 대형 마트 등에서 폭립으로 팔리는 돼지갈비 가공품 등이 원산지 표기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 음식점에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5가지 식품과 쇠고기 가공품의 원산지만 표기해 왔다.



신재생·전력사업자 전력판매 조건 완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판매 조건이 완화되고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에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소형발전사업자의 기준이 2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200kW 초과 1000kW 이하 소형발전사업자는 대략 175개 업체로 아들이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입을 것 예상된다. 또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부담해야하는 전력판매 수수료가 경감된다. 현행 전력판매수수료는 kWh당 0.01원 이내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경우 생산단가와 기준단가의 차이가 날 경우 이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자가 급증해 발전차액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지원대상을 점차 축소해 2011년께 폐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폐지에 앞서 부대비용을 낮추어 주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또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시 기존 지원한계총량인 3000kW 범위내에서 허가를 면제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제3항 제2호 관련)**

법령 해설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만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공사업"이라 한다)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공사업"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하 "종합공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종합공사업자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전문공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공사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공사업자는 당연히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고, 전문공사업자도 종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에 있어서 "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써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從)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그 부대공사 즉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의 종(從)된 공사이거나 주된 전문공사의 부수되는 전문공사이므로 주된 부분에 따라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와 관련한 종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건설업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전문건설업자는 20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전문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복합공사(현행 종합공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전문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전문공사로 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연혁적으로 살펴보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전문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가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제8조제2항),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간 서로의 업종을 겸업하려면 각각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조제2항과 제3항),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5조제1항), 전문공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그 공사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며, 그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자가 도급받아 시행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입니다. 그 외의 경우 전문공사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업체와 부당 계약 체결

경상남도 교육청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업체로 분류된 학교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제한업체인 A유통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A업체는 지난 2007년 3월 학교급식 식물을 납품하면서 한우 대신 젓소를 납품해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1년 간 계약 제한 대상 업체로 분류됐다. 이는 경남도 교육청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수의견적서를 받으면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로 알고, 입찰참가 제한 대상자 여부만 확인했을 뿐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업체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유통은 B초등학교와 1천 800여만원의 식재료 납품 계약을 맺는 등 관내 초등학교 5곳과 모두 9천여만원의 부당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각급 학교의 계약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한 업체로 분류된 대상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 이행을 지체하거나,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기타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따져 1년 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태양광 소재 생산업체 (주)글로벌과 투자 협약체결

경기도에 있는 태양광 소재 생산업체 (주)글로벌이 대구 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8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김법일 대구시장과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김종원 (주)글로벌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글로벌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본사를 대구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고, 향후 5년간 1,250억원을 투자해 2011년까지 태양전지용 잉곳, 웨이퍼,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생산 공장은 태양전지산업의 핵심소재인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양산할 수 있는 시설로서 33,000㎡(1만평)부지에 2011년까지 50MWp, 2012년 150MWp, 2014년까지 300MWp 급의 3단계에 걸쳐 생산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로 인해 설비투자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연 매출액 5천억원과 9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기업 유치에 계기로 향후 태양광산업 전후방 연관 사업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협력업체의 동반이전 등 국내외 투자 유치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글로벌은 국내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과 웨이퍼 시장의 선두주자로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300kg급 잉곳 개발을 비롯해 지난해 세계 최초 차세대 450kg급 잉곳 양산기술 개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단독주택, 투자 전성기를 맞이하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르니 마니, 대출규제를 강화하느니 마니
여부에 관심이 가 있는 사이 조용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바로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 토지로 인한 자산 가치 높아져

건축법상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은 협약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들은 기옥 1채가 몇 가구로 구성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 각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등기가 안 된다는 것과 공동주택과 달리 토지가 자산 가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같다. 토지 비중이 크다는 것은 단독주택의 최대 강점이다. 바로 적잖은 규모의 토지를 수반한다는 데에 있다. 고급주택지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단독주택의 일반적인 토지 규모는 보통 100㎡~300㎡.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고, 재개발,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의 보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상

단독주택의 또 하나 강점은 실주거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다. 단독주택은 1~2가구만으로 구성된 것도 있지만, 도시지역 내 소재한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지하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구조로 7가구 이상이 거주하면서 3층은 소유자가 살고 나머지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거주하는 실수요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증부월세 또는 전세 임대를 통해 시중금리 이상의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재투자 가능한 상품이 바로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때는 다음 아닌 2000~2001년과 2002년~2003년 상반기다. 2000~2001년의 경우 외환위기를 벗어날 즈음 있었던 전세대란을 등에 업고 다세대, 연립이나 원룸형 다가구주택 건설을 위해 단독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2002년~2003년 상반기에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반주거지역 중 세분화작용을 피하고 그 이전의 용도지역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탓에 단독주택 인기가 치솟았다.

단독주택, 제도 여건 달라져

하지만, 그 이후 단독주택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다. 중 세분화로 용적률이 감소됐고, 재개발, 뉴타운, 균형발전촉진 등 각종 명목의 개발호재로 인해 지가 상승마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져 개발 및 활용가치가 떨어졌다. 주차장 기준도 가구당 1대로 강화되면서 불법이나 편법이 동원되지 않고는 단독주택을 연립, 다세대나 원룸형 주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 됐다. 주택에 대한 중부세 과세는 단독주택 투자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동안 있어왔던 지가 상승으로 상당수의 단독주택이 중부세 부과대상주택공사가격 6억원 초과, 2005년 8.31대책 때 강화에 포함돼 관심에서 사라졌다. 일반투자 수요는 중부세 부담으로 개발업자 수요는 사업성 미흡으로 단독주택 투자를 꺼렸던 것이다.



부동산가이드 _ 편집국

단독주택, 투자여건 개선

이런 약자가 사라지며 단독주택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또 세율이 인하됐고, 과표구간도 조정됐으며, 세대별 합산과세가 인별과세로 바뀌면서 과세기준 금액도 단독형의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주택으로 상향 조정돼 총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2000~2001년 상황에 버금가는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것도 호재다. 사상 초유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 가을철 이사 수요마저 겹칠 경우 이 전세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우려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도 가치 상승에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 8~9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전세대란에 편승해 임대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등 서민형 주택 공급을 위한 단독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만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해 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투자 호재

MB정부의 도시지역 내 주택공급 증대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목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전용 85㎡ 이하, 원룸형 주택전용 12~30㎡ 이하), 기숙사형 주택전용 7~20㎡ 이하로 구분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49가구까지 지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나 청약가점제, 지역우선공급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높이거나 관리사무소 등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소음 배치 조정 등의 건설기준도 공동주택보다 완화된다. 특히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구비요건이 각각 가구당 0.2~0.5대, 0.1~0.3대로 대폭 완화돼 그동안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수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동안 다세대주택이나 원룸형 주택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민간업체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참여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고, 주택수요 해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택 과수요 집중지역 눈여겨 보아

그럼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전세나 보증부월세 등 임대수요가 많은 곳, 도심 업무밀집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 공원, 하천 등이 있어 쾌적한 곳을 비롯해 관공서, 쇼핑, 문화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좋다. 특히, 이런 입지 조건에 대한 분석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과수요 집중 지역을 눈여겨보고 결정하면 도움이 된다. 출퇴근 수요, 학군수요, 산업체 근로자 수요 등 기본적으로 매매나 임대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단독주택을 물색하되 취득 목적연립, 다세대주택 신축을 통한 분양이나, 원룸형 주택 개발을 통한 임대 사업이나,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나 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CMA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증권업계의 CMA 열풍이 뜨겁다. 연 5%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투자 열풍, 은행과 연계해 수시입출금, 이체, 결제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등이 CMA로 자금을 몰리게 하고 있다.

CMA란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 불린다.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남은 고객예탁금을 MMF 등 단기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실적 배당한다.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수시 입출금·이체·결제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MA는 RP형, MMF형, MMW형, 총금형 등으로 나뉜다. RP형은 확정 금리를 제공하지만 나머지는 운용수익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제공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총금사 CMA는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상대적인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해당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CMA 상품에 돈을 맡기기 전에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에 해당 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은행과 총금사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천만원까지는 원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반면 증권사 CMA(우리은행 총금형 CMA 제외)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호종합금융과 메리츠 종합금융은 총금사 CMA를 운용한다. 교보, 굿모닝 신한, 대신, 대우, 동부, 동양종합금융사는 (증권사 CMA와 증권사 CMA 동시판매),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우리투자, 유진투자, 이트레이드, 푸르덴셜투자, 하나다투, 하리투자, 한국투자, 한화, 현대, CJ투자, HMC투자, BK투자, LIG투자, SK, NH투자 증권 등 25개사는 증권사 CMA를 운용한다.

증권사 CMA 이런 상품들이 있다!

RP형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는 은행 예금처럼 확정 금리 상품이며 투자기간이 짧더라도 은행예금 보다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다. 주요한 투자 상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국공채, 은행채, 신용 우량채권(AAA 등급의 회사채)으로 안전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판매한 회사에서 확정금리로 약정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자유약정형과 일정기간 동안 묶어두는 약정형으로 구분되며, 약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도 높다.

MMF형

MMF(Money Market Fund,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는 투신사가 단기자금시장에서 투자하는 펀드의 일종이다. MMF형은 금리가 비교적 높은 단기 채권(만기 1년 미만)에 국공채·콜론·CP·CD 위주로 투자하며 하루만 맡겨도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 금융상품을 말한다. 우량 채권에 투자 하므로 채권 자체가 부실해지지 않는 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

MMW형

MMW(Money Market Wrap, 머니마켓랩)형은 고객이 투자한 돈을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면, 한국증권금융이 은행예금 상품 및 콜론(Call Loan)에 대부분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RP와 MMF와 같이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으나 원리금이 영입일마다 정산하므로 복리효과를 내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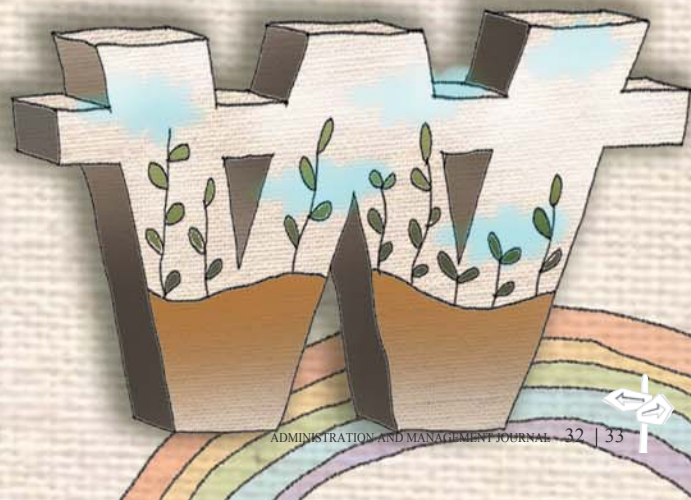
총금형

총금형은 종합금융회사가 고객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예금보호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총금사나 증권사(총금사)를 합병한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자동납부나 자동이체 등의 부가 서비스 기능이 있어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의 기능과 유사하다.

주요 증권사 CMA 상품 종합 비교

증권사	유형	수익률	연계계좌	원금보장여부
굿모닝신한증권	RP형	3.1~3.15%	신한은행	X
대신증권	RP형	3.0%	우리/국민은행	X
	MMF형	2.79%		
대우증권	RP형	2.9~3.2%	우리은행	X
	MMF형	연 3.0%수준		
동양증권	RP형	3.0%	우리/국민은행 농협/신한은행	O
	중금CMA, CMA발행어음	3.0~3.4%		X
미래에셋증권	RP형	2.75%	우리/국민은행 농협	X
	MMF형	2.95%(실적배당)		
삼성증권	RP형	2.9~3.4%	우리/국민은행 농협	X
	MMF형	실적배당		
우리투자증권	RP형	3.1~3.35%	우리은행	O
	중금형	2.0~2.3%		X
	MMF형	시중금리적용		X
하나대투증권	RP형	3.0~3.1%	하나은행	X
	MMW형	시중금리적용		
	MMF형	실적배당		
한국투자증권	RP형	3.0%	우리/국민은행	X
	MMW형	연3.0% 수준		
	MMF형	실적배당		
한화증권	RP형	3.1~3.2%	우리/국민/농협	X
현대증권	RP형	3.2~3.3%	우리은행/농협	X
	MMW형	연 2.95% 수준		
	MMF형	실적배당		

※ 각 증권사 종합기나다 순). 투자 기간에 따라 수익률 다름. 2009년 2월 27일 기준





» 리더추천 릴레이



솔선수범하는 생활철학 실천가,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김경민 사무총장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 발족 당시 같은 분과에서 함께 일하면서부터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필자는 시민운동가에 대해 대안 없이 당위적인 규범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다. 김 총장은 필자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시민운동가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180도 변화시켜준 인물이었다. 그는 끝없는 열정으로 온 몸을 던져 자신의 이상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다 인간답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실례로 지금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이 일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좋은 본보기다. 김 총장은 제일 먼저 자신의 집 담장부터 허물어 시범을 보여준 주인공이었다. 또 그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인 대구 YMCA 청소년 평화마을을 열었다. 이를 통해 지역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가출 청소년 사회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실행하면서 청소년 쉼터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그는 프랑스 파리의 재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강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생태문화경관 조성사업을 벌이는데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이 사업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대구 YMC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실업자들을 환경지킴이 파수꾼으로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금호강변과 신천을 친환경적인 개발로 이끄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밖에도 그는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대구에스페이스(dgespaces)사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희망자전거제작소'를 열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자전거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교통문화도 바꾸겠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김 총장이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나날이 퇴락해가는 도심지를 사람 냄새가 나는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 총장은 단순히 당위적 주장과 대안 없는 비판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생활철학의 실천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의 이러한 자세와 열정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제)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석형 부원장



고객감동의 가치추구

에코가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교육컨설팅 / Education Consulting
리더십, 역량개발, 기타 교육컨설팅



리서치 / Research
여론조사, 시장조사, 만족도 조사



학술연구 / Scientific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경영평가



자산관리컨설팅 / Asset Management Consulting
부동산, 주식, 금융, M&A투자컨설팅

Anyone, Anytime 문경골프장

정규18홀대중골프장

문경GC

백두대간 자연속의

가까운 곳, 저렴한 비용, 편안한 라운드
천혜의 자연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문경레저타운

Mun Gyeong Leisure Town Co., Ltd.

경북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1

예약안내 : 054-550-5005 | 팩스 : 054-572-3103~4 | 홈페이지 : www.mgle.co.kr